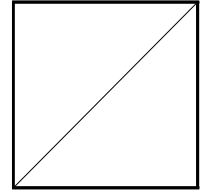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7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1. 2. 18. (제 3 차)	

2021년도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운영계획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윤 석 현
제출 연월일	2021. 2. 18.

1. 보고 주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수립한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 이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금감원의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핵심 리스크요인을 중심으로 중점 검사사항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 방식을 운영

나. 세부 검사 실시계획

대외 공개된 선정지표를 바탕으로 선별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시 결과 등에 기초한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실시*

* 2021년 중 총 793회 검사에 23,630명의 연인원을 투입할 계획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나. 기타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

2021년도 감사업무 운영계획

2021. 2.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 최근 감사환경 및 리스크 요인	1
II . 2021년 감사업무 운영계획	3
1. 감사업무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	4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라.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2. 감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8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연한 감사업무 운영	
나. 한정된 검사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 확립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III . 2021년 세부 감사계획	10
1. 개 황	10
2. 검사종류별 계획	11
3. 공동검사(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13
(붙 임)	
1. 검사대상 금융회사 현황	14
2. '21년도 종합검사 핵심부문	15

I. 최근 검사환경 및 리스크요인

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잠재불안요인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잠재된 부실*이 금융지원 축소 시점에 현실화될 우려

* 대출지원 증가(분모효과), 원리금상환유예 등의 효과로 연체율 착시 가능성

- 저금리 고착화로 금융회사의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쏠림 등 건전성 취약요인 상존

- 특히, 해외 상업용부동산, 항공·운송업종 부진 등으로 그간 투자가 확대되어 온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위험 증가

* 전 금융권 대체투자 자산 : '20.9월말 현재 340조원, 총자산의 6.3% 수준
(고유계정, 유가증권·대출채권 형태 포괄)

⇒ (리스크요인) ① 금융지원 축소시 '절벽효과' 우려, ② 손실흡수능력 취약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전이, ③ 해외·대체투자 자산의 손실확대

② 금융의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한 경쟁심화 및 리스크 확대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산업내 영업경쟁 심화 전망
- 코로나19 이후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이에 수반된 디지털리스크는 점차 확대

* 예) '20.상반기 중 간편결제 이용실적(일평균) : 731만건 2,139억원 [전기대비 8.0%↑, 20.3%↑]

⇒ (리스크요인) ④ 경쟁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⑤ 정보유출 위험 등 사이버보안리스크 및 제3자리스크 증가

3] 고수익 추구 유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위험 증가

-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외형경쟁 및 단기 수익 추구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촉발요인 지속
-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과 비대면 판매채널이 확대되면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정보비대칭 확대 등 피해위험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불법 보험모집, 불법추심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

⇒ (리스크요인) ⑥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지속, ⑦ 금융상품의 복잡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부문 증가, ⑧ 금융질서 문란행위 지속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환경 변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등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이 강조되고, 금감원도 금융회사 경영방침·내부통제에 대한 종합적 검사 필요

*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시 제재 근거가 반영된 법안 계류 중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능별 규제*가 도입되어 검사범위가 확대되고, 검사대상기관 수**도 지속 증가 예상

* 판매규제를 적용받는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의 범위 확대

** 검사대상기관 수(개) : ('17말) 4,966 → ('18말) 5,491 → ('19말) 5,700 → ('20말) 5,983

⇒ (리스크요인) 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미흡 ⑩ 검사범위·대상 확대로 검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Ⅱ.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목 표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1.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한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 ①)
- 건전성 악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 ②)
-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 점검(☞ ③)

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 디지털경쟁 심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④)
-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 점검(☞ ⑤)

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관련 집중 검사(☞ ⑥)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통한 검사 사각지대 방지(☞ ⑦)
-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에 선제적 대응(☞ ④, ⑦)
-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⑧)

라.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종합적 점검 강화(☞ ⑨)
- 신규편입 검사 대상 및 위험부문 집중 검사(☞ ⑩)

2.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연한 검사업무 운영

나. 한정된 검사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 확립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21년 주요 리스크요인

- ① 금융지원 축소시 '절벽효과', ② 손실흡수능력 취약 금융회사의 부실화, ③ 해외·대체투자 자산의 손실확대, ④ 디지털 경쟁심화, ⑤ 디지털리스크 증가, ⑥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지속, ⑦ 소비자피해 우려 부문 증가, ⑧ 금융질서 문란행위 지속, ⑨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미흡, ⑩ 검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下 경쟁심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 금융시스템 안정과 ②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방향 수립
- ① (금융시스템 안정)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을 중점 점검하여 관리하고, 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② (금융소비자 보호) 다.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엄정히 검사하여 금융 산업 신뢰를 회복하고, 라. 소보법 등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한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

- 잠재부실에 대비 연체율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손실흡수능력 확대 유도

□ 건전성 악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 고착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변화* 및 건전성 악화 요인 점검

* 예) 수익성 저하에 대응한 투자심사의 관대화 가능성, 판관비 축소를 위한 인력 재배치·점포 관리방식 변화, 보험 인수기준 완화 등

- 대손비용 급증, 보험 역마진 등 손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무 건전성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MOU체결 등 통해 선제적 자구계획 요구

□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 점검

- 해외·대체투자 펀드, 부동산PF대출 등 고위험자산 편중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실태 점검

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 디지털경쟁 심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디지털 영업확장 과정에서 과열경쟁 및 건전성 취약요인을 모니터링 하고, 비대면거래를 활용한 금융사기 등 사고방지 대책 점검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상 취약점 점검

☐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 점검

-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테마검사(점검) 실시
- 간편결제 확대 등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등에 대해 IT시스템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3자 리스크에 대응
- 혁신금융서비스 중단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관련 중점 검사

-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중점 검사
-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19.11월) 이후 마련된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관련 모범규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시장규율 확립

*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20.6월),
은행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20.9월)

-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
-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 및 증권사의 역외 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보호 절차 점검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통한 검사 사각지대 방지

-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 미스터리 쇼핑, 다발 민원·분쟁 정보 등 소보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점사와 연계

* 예) 전 권역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의 분석지표 등

□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에 선제적 대응

- 사모펀드 판매 위축 등에 따른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및 동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 모니터링

* 예) 비이자수익원으로 방카슈랑스 및 신탁판매 확대 등

-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심의절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침해 요인 점검
-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및 모집질서 위반, 공모규제 회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
- 경기악화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구속성행위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강화

라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 경영진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경영 유도

-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중점 점검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 강조

□ 신규편입 검사 대상 및 위험부문 집중 검사

- 소보법상 검사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온투법상 8.26. 등록유예 만료)에 대한 투자자모집 관련 준수사항 점검
-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수요* 대응을 위한 테마검사 확대

* 특정금융정보법상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검사대상에 편입

- 장기 미수점 및 상시감시 결과에 따른 고위험 금융회사를 선별·검사하여 검사 사각지대 방지

2 검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 ◆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협업검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등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여 검사업무의 효율화 추진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연한 검사업무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검사 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우려,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등 긴급 현안 위주로 검사 실시

□ 언택트 방식의 검사방식 정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원격·비대면 검사 방식*을 적극 활용

* 화상회의·컨퍼런스콜 장비를 갖춘 원격 검사장 설치, 현장·서면검사반 동시 운영 등

나 한정된 검사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 확립

□ 금융의 융·복합화에 대응한 협업검사 활성화

-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여러 권역에 걸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간 협업검사를 활성화

* 예) 고위험 금융상품 점검을 위해 운용사·은행·증권사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겸영업무, 업권간 교차거래 등 검사시 타권역 검사인력 참여

□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제도 정착

-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방안'*(19.4월)에 따른 종합검사를 일관되게 실시하고, 그 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보완 추진

* 감독목표에 부합한 종합검사 선정지표 운영, 권역별·회사별 핵심부문 선정, 수검부담 완화 방안 시행(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등)

□ 금융회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강화

- 한정된 검사자원을 감안하여 다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수요 발생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기능 활용* 제고

* 특정 이슈에 대해 금융회사가 먼저 자체점검토록 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에 착수

-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과의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금융회사 자산평가 등에 대한 감사정보(감사조서)를 상시감시 및 검사에 활용*

* 지주, 은행, 보험, 여전사의 경우 법상 외부감사인에 정보제공 요구 가능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반복 지적유형 등을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자체시정 유도

* 점검과제를 협의·선정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검사국에 보고

** '20년 상호금융권역 도입, '21년부터 자산운용사(수탁고 상위) 도입 예정

□ 업계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감독·검사 현안사항 및 주요 검사 지적사례, 내부통제 정보·경험 등을 공유

* 내부통제워크숍, 이사회 의장·상근 감사위원 간담회(은행), 준법감시인협의회(보험), 상시감시협의회(상호금융 중앙회) 등

-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은 신속히 업계에 전파하여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 연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 대외 공표

['21년도 검사 휴지기]

- ▶ 하계휴가('21.7.26 ~ '21.8.6.), 연말연시('21.12.23 ~ '22.1.4.)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

Ⅲ. 2021년도 세부 검사계획

- ◆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확대 실시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1 개 황

- '21년도 검사횟수는 **793회***, 검사연인원(검사인원×검사일수)은 **23,630명***(검사당 평균 29.8명) 계획

* 이슈사항 검사 등을 위한 "예비목적 검사" 138회(2,871명) 포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사가 축소*되었던 전년도(검사횟수 613회, 연인원 14,186명)에 비해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444명(+66.6%)** 증가

*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권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 현안 외에 현장검사를 자제한 영향

※ 다만, '21년도 검사횟수(793회)는 예년['18년 763회, '19년 724회(대부업자 268회 일제 서면검사 제외)]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임

- 검사인력이 집중되는 종합검사 확대 등으로 검사횟수(+29.4%)에 비해 검사연인원의 증가폭(+66.6%)이 크게 나타남

2021년 연간 검사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실시 횟수				검사연인원			
	2020	2021	증 감	증감률	2020	2021	증감	증감률
종합검사	7	16	+9	+128.6	3,314	5,134	+1,820	+54.9
부문검사	606	777	+171	+28.2	10,872	18,496	+7,624	+70.1
현 장	193	494	+301	+156.0	6,608	16,315	+9,707	+146.9
서 면	413	283	△130	△31.5	4,264	2,181	△2,083	△48.9
합 계	613	793	+180	+29.4	14,186	23,630	+9,444	+66.6

2 검사종류별 계획

가 종합검사

- (검사횟수·연인원) '20년 7회*(3,314명) → '21년 16회(5,134명)로 전년 대비 9회(1,820명) 증가

* 당초 17회 실시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사모펀드 등 현안 부문검사 집중으로 10회 미 실시

-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 실시

* '19.4.3.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의 선정지표 사용

** (붙임 5) '21년 금융권역별 종합검사시 핵심부문

2021년 권역별 종합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횟수			검사연인원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증감률
은행, 지주	3	6	+3	1,565	2,350	+785	+50.2
금융투자	1	4	+3	498	984	+486	+97.6
보험	2	4	+2	1,016	1,440	+424	+41.7
중소서민	1	2	+1	235	360	+125	+53.2
합 계	7	16	+9	3,314	5,134	+1,820	+54.9

나 부문검사

- (검사횟수·연인원) '20년 606회(10,872명) → '21년 777회(18,496명)로 전년 대비 171회(7,624명) 증가*

* 현장검사 확대, 중요 부문검사에 대한 사전검사 활성화('21년 73회 계획) 등 영향

2021년 권역별 부문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횟수				검사연인원			
	2020	2021	증감	증감률	2020	2021	증감	증감률
은행	47	71	+24	+51.1	1,504	2,785	+1,281	+85.2
금융투자	149	157	+8	+5.4	4,472	4,428	△44	△1.0
보험	77	111	+34	+44.2	1,833	3,515	+1,682	+91.8
중소서민	52	211	+159	305.8	1,720	4,236	+2,516	+146.3
기타*	258	185	△73	△28.3	1,083	2,950	+1,867	+172.4
지원	23	42	+19	+82.6	260	582	+322	+123.8
합 계	606	777	+171	+28.2	10,872	18,496	+7,624	+70.1

* IT·핀테크전략국, 핀테크혁신실, 자금세탁방지실, 보험사기대응단 등 기능별 검사부서

□ (평가성·준법성) 부문검사(777회) 중 평가성검사는 80회(10.3%), 준법성검사는 697회(89.7%) 실시 계획

- 금융회사의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성 검사(80회, 3,891명)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등의 확대에 검사비중 증가*

* 부문검사 중 평가성 검사 비중(회수/연인원) : ('20년) 5.3%/6.0% → ('21년) 10.3%/21.0%

- 위규사항 확인·적발 목적의 준법성 검사(697회, 14,605명)는 영업행위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회수·연인원 확대 예정

검사유형별 부문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회수				검사 연인원			
	2020	2021	증감	증감률	2020	2021	증감	증감률
평가성	32 (5.3)	80 (10.3)	+48	+150.0	651 (6.0)	3,891 (21.0)	+3,240	+497.7
준법성	574 (94.7)	697 (89.7)	+123	+21.4	10,221 (94.0)	14,605 (79.0)	+4,384	+42.9
부문검사 합계	606	777	+171	+28.2	10,872	18,496	+7,624	+70.1

* 괄호는 부문검사 합계 대비 비중(%)

※ 평가성 / 준법성 검사(검사목적에 따라 구분)

- 평가성 검사 : 리스크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한 컨설팅 방식의 검사
- 준법성 검사 : 관련법규 위규사항 적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검사

다 지원[支院] 검사

□ 본원 검사부서는 지원(4대 광역시)의 관할지역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포함)에 대한 부문검사 일부를 위임

- '21년 지원에 위임할 검사는 총 42회* ('20년 실적 23회)

* 중소서민 금융회사(19회), 은행 영업점(11회), 보험 영업점·대리점(11회), 증권사(1회)

- 지원은 민원에서 제기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영업점 내부 통제 관련 사항 등을 위주로 검사할 예정

- 우리원 검사부서는 검사계획 수립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대상회사 및 검사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실시
- (한은) 코로나19로 '20년에는 공동검사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동검사 실시 예정
- * 8회('18) → 9회('19) → 3회('20)
- (예보) 공동검사 의무실시 대상 저축은행*(7개)을 포함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동검사 실시 예정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상호저축은행법」 §21①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 1회 이상 공동검사 실시(공동검사 MOU)
- 한편, 공동검사와 별개로 전문사모운용사, P2P연계대부업자 등 검사시 예보 인력을 지원받아 현장검사에 활용할 예정*
- *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 검사업무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19.11)
- 공동검사 업무 개선 및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은·예보와 공동검사 워크숍 개최 예정(필요시 비대면방식 활용)

최근 5년간 한은·예보 공동검사 실시 현황

(단위 : 회, 개사)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한은(A)* (괄호 안은 회사수)	9(20)	10(19)	8(19)	9(19)	3(4)
은행 및 지주	6(17)	6(15)	5(16)	6(16)	2(3)
금융투자	3	4	3	3	1
예보(B)	10	9	8	12	7
은행	1	1	1	1	1
저축은행	6	5	4	8	5
금융투자	1	1	1	1	-
보험회사	2	2	2	2	1
합 계(A+B)	19(30)	19(28)	16(27)	21(31)	10(11)

붙임 1 | 검사 대상 금융회사 현황

□ '20년말 기준 5,983개('19년말 5,700개 대비 283개 증가)

구 분	검사 대상 금융회사	회사수
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10
은행부문	시중은행(6), 지방은행(6), 인터넷전문은행(2), 특수은행(5), 외국은행 국내지점(36)	55
중소서민 부문	상호저축은행(79), 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1,118), 수산업협동조합(90), 산림조합(138), 신용협동조합(87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카드사(8), 할부금융(23), 리스(26), 신기술사업금융(63), 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제외, 954) ²⁾ ,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3,385
보험부문	생명보험사(24), 손해보험사(18),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60
금융투자 부문	증권회사(45),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1), 선물회사(4), 신용평가회사(4), 채권평가회사(4),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276), 종금사(1),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9), 자산운용회사(326), 투자자문회사(220), 사모투자전문회사(797),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8),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299), 부동산신탁사(14), 한국포스증권,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9), 우정사업본부	2,045
기타부문	소액해외송금업자(28), 전자금융업자(120) ³⁾ , 신용정보업자(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통신업자(27),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⁴⁾ , 혁신금융사업자(45) ⁵⁾ , 지정대리인(11) ⁶⁾ , P2P연계대부업(163)	428
합 계 ¹⁾		5,983

주1: 유통계카드사(2), 보험대리점(31,067), 보험계리업(21), 손해사정업(1,419), 보험중개사(145), 역외투자자문회사(193), 회계법인(164), 사모M&A펀드(3) 등 33,014개 제외

주2: 금전대부업(36), 대부채권매입추심업(297), 금전대부·대부채권매입추심업(621)

주3: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37개사 중복 제외(부가통신업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소액해외 송금업자 부문에 포함)

주4: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퇴직연금사업자 48개사 중복 제외(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에 포함)

주5: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58개사 중복 제외(은행, 중소서민금융, 보험, 전자금융업자 부문에 포함)

주6: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13개사 중복 제외(혁신금융사업자(8), 전자금융업자(5) 부문에 포함)

붙임 2 2021년도 종합검사 핵심부문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은행 (지주 포함)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 그룹 차원의 사업 및 계열사 협업거래 현황 • CEO 경영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현황 • 글로벌 사업 리스크관리 현황
증권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결합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 신규 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현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 •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 현황 • 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
자산 운용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 고유·고객재산 간, 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 • 펀드 자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투자자 정보제공 현황 • 펀드 유동성 관리 현황 • 판매사의 운용지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 •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 현황 •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보험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부 • 보험금 지급업무 •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체계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준법활동,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체계 •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및 거래절차의 공정성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 RBC 비율 관리, 자산운용 전략 • 책임준비금 적립 등 부채관리 현황
여전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 현황 •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구조 • 전화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 등 비대면 영업 내부통제 현황 • 비대면채널 영업행위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현황 •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황 •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동성 관리 현황 •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현황 • 자동차금융 등 경쟁격화 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성 영업행위, 부담담보 또는 보증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정책, 시스템 마련 및 운영 현황 • 조합의 감정평가업무, 비이자수익 취급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 • 민원감축정책 및 민원처리 업무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고 예방 등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내부통제제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황 • 자체감사활동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가 취급하는 부동산PF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 • 중앙회의 대체투자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 대출모집인 관리 및 지도업무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공동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지도·감독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	감독총괄국
연 락 처	-	02-3145-8010